Online Series

CO 10-22

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

- 기존 의견의 검토와 의문점 -

박 형 중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천안함을 왜 공격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분석하고 대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중요성에 부합할 만큼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논의를 위해 본 글은 일차적으로 현재 제기되어 있는 의견을 전반적으로 요약하여 소개한다. 두 종류의 견해가 있다. 먼저 김정일이 천안함 공격을 명령했다는 견해와 그 하급자가 명령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김정일이 명령했을 것으로 보는 데는 10가지 종류의 의견이 제시된다. 첫째, 대청해전 복수론 둘째,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 활용론 셋째, 6자회담 파탄용론 넷째, 한미 이간론 다섯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 자초론 여섯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 유도용 도발론 일곱째, (간접적 배경으로) 핵 무기 보유에 따른 대담성 증가론 여덟번째, 중국 결박용론 아홉째, 내부 위기 관심 호도론 열째, 종합 셋트 동기론 등이다. 다음으로 김정일은 천안함을 공격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북측 소행이라면 오히려 하급자의 명령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제기된 여러 견해를 종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질문을 제기한다.

김정일이 천안함을 공격을 명령한 이유에 관한 10가지 견해

김정일이 천안함을 공격을 명령했어야 할 이유로서 가장 유력하게 등장하는 것은 대청해전 복수론이다. 대청해전이란 2009년 11월 10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해군간의 교전을 지칭한다. 구체적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1월 10일 북한 경비정 한척이 한국 측의 경고사격과 경고통신을 무시하고 남하했다. 그러던 중 북 경비정이 한국측 경비정에 갑자기 함포를 조준 발사한 것에 대응하여 한국 측이 대응사격을 했다. 북 경비정은 반파된 상태로 북으로 복귀했다.

이 사건을 한국은 대청해전이라 불렀다. 북한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복수를 다짐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청해전 사흘 만인 11월 13일 군사회담 북측 단장(김영철) 명의로 대남 통지문을 보내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당시 통지문을 보낸 김영철 상장은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다. 11월 27일 김정일은 남포시에 위치한 서해함대사령부(해군587연합부대)를 시찰했다. 여기서 김정일은 "앞으로 훈련을 더욱 강화해 바다의 결사대 영웅들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 12월 말 김정일과 후계자 김정은이 남포 서해사령부를 방문하여 사령관 정명도를 비롯한

1) 이영종, "김정일 '바다의 결사대 돼라' 작년 서해함대 찾아 지시," 『중앙일보』, 2010년 5월 6일.

해군 지휘부에게 대청해전 복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2] 서해함대사령부는 2010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대청해전 보복 결의대회'를 열고 서해상에서의 패퇴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고 한다.[3] 대청해전 이후 북한은 서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왔다. 2009년 12월 21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을 평시 해상사격 구역으로 선포했다. 이후 북한은 2010년 1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서해 백령도 동북쪽 해상 1곳과 백령도 동남쪽 해상 1곳에 각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 3월 26일의 천안함 공격은 김정일의 허가, 정명도의 서해함대사령부, 김격식의 4군단이 지원하는 가운데 정찰총국의 주도로 실행되었다고 한다.[4]

천안함 침몰 이후 관련자들은 포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대청해전 이후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되었던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명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4월 14~24일 사이 다시 대장으로 복귀했다.[5] 아울러 4월 14일 군 장성 100명의 승진 인사를 하면서 정명도 해군사령관이 상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했다.[6] 김정일은 4월 25일 인민군 창건 78돐을 맞아 586부대(정찰총국)을 방문했으며, 김영철 상장의 영접을 받았다.[7]

둘째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 활용론이다. 미국 정보 기관 사이의 주류 의견에 따르면, 김정일이 천안함 공격을 명령했다. 그 목적은 2년 전 발생했던 뇌졸중 때문에 취약해진 자신의 통제력과 위신을 재구축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8] 그 간접증거로, 김정일이 인민군 창건일인 4월 25일 586부대(정찰총국)을 방문한 것,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명국이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되었다 다시 대장으로 승진한 것, 개별 장령이 독단으로 작전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천안함 침몰과 김정일을 직접 연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한다. 먼저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김정일을 지목하는 경우 오히려 김정일 일가가 노리는 바에 말려들기 때문이다. 즉 김정일 일가가 한국과 서방에 대해 또 한 번 전설적 공적을 세웠다는 것을 선전해 주어버린다는 것이다. 한편 많은 한국의 전문가들도 천안함 침몰을 후계체제 구축 활용론의 견지에서 해석했다.[9] 즉, 한국 군함을 침몰시킴으로써 김정일은 위기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부 단결을 강화하고 군대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은 군부지지를 토대로 김정은 후계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과거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도 유사한 심각한 대남 도발행동이 있었고 그것이 김정일로의 후계구축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천안함 격침을 통해 김정은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위상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셋째 논리는 천안함 침몰은 6자회담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파탄론과 촉진론이 있다. 먼저 파탄 목적론을 보자. 이 같은 논리는 다음과 같은 정황논리에 근거한다.[10] 즉 미국과 북한은 지난 3월 26일 천

2) 현건, "천안함 5적(賊)," 『열린북한방송』, 2010년 5월 27일.
3) 이영종, "북 서해함대, 2월 대청해전 복수 결의 … 김정일이 지시," 『중앙일보』, 2010년 4월 13일.
4) 현건, 천안함 5적(賊), 『열린북한방송』, 2010년 5월 27일.; 정찰총국이 아니라 김격식이 주역이라는 논리도 있다. 이상흠, "천안함 사건은 정찰총국 협조하에 4군단장 김격식이 저질렀을 것으로 확신," 『월간조선』, 2010년 6월호.
5) 정용수, "대청해전 뒤 강등된 북 김명국, 천안함사건 후 다시 대장 복귀," 『중앙일보』, 2010년 4월 26일.
6) 이영종, "해군사령관 대장 승진 … 패전 만회할 공 세웠나," 『중앙일보』, 2010년 4월 15일.
7) YTN, "김정일, '대남공작 본산' 정찰총국 방문," YTN동영상, 2010년 4월 27일.
8) David E. Sanger, "U.S. Implicates North Korean Leader in Attack," *The New York Times*, 22 May 2010.
9) Choe Sang-Hun, "Succession in N. Korea May Be Behind New Belligerence," *The New York Times*, 27 May 2010.; 김용훈, "김장수 '천안함 사건, 북한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 『Daily NK』, 2010년 4월 16일.; Victor D. Cha, "North Korea: Succession Signals,"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26 May 2010.

안함 사건 발생 직전 북·미 양자회담 및 (예비) 6자회담의 연쇄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위한 비자 발급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는 급작스러운 반전이다. 그 이유는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바라지 않던 북한 군부 등 강경파가 외무성 등 협상파를 누르고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면서 정책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라 추측되고 있다. 한편 브르킹스 연구소의 Richard Bush는 중국에게 소중한 6자회담을 중국이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정일이 한국 군함 격침을 명령했다고 주장한다.[11] 김정일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따라서 6자회담이나 협상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2009년에 미사일 실험 및 핵실험을 행한 것도 협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넷째는 셋째와 반대 논리이다. 천안함 사건이 6자회담을 결국 촉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미의 사이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12] 즉 북한은 보다 광범한 군사적 외교적 전략 추진의 틀에서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목적은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다. 북한은 벼랑끝 전술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에 언제 물러나야 할 줄을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천안함 사건처럼 한국에 강경한 자세를 취한 이후, 미국에 대해 비핵화 문제와 6자회담 참가에 관한 양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만약 천안함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은 천안함과 비핵화 문제를 분리하는 입장을 취하고, 내켜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 6자회담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이다. 다른 논자는 결과는 같지만, 다른 방식의 논리를 내세운다.[13] 북한이 향후 천안함 사건에 연루됐음을 인정하면서 '군부의 독자적 도발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종결하고, 비확산을 위해 6자회담에 올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논리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이 자초한 것이다. Mike Chinoy는 천안함 공격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갑작스럽게 바꾸어버렸을 때 이미 예견되어 오던 사건이라고 주장한다.[14]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다시 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새로운 긴장격화 사이클이 시작되었고, 결국 천안함 침몰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Selig Harrison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한다. 즉 이명박 정부가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의 결과를 거부하게 되자, 북한은 한국이 또 다시 북한의 붕괴와 한국으로의 흡수를 기도하고 있다는 뿌리 깊은 두려움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15]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보복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유도용 도발이라는 주장이다. Victor Cha와 Scott Snyder가 이러한 논리를 전개한다.[16] 즉, 김정일 정권이 한국의 보수정부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평양은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에 길들여진 나머지, 현 정부가 요구하는 상호주의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발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평화 유지를 위해 북한 보다 더욱 노력할 것이고 더 많이 지불하고자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북한은 소규모 도발을 활용하

10) 강찬호, "북한 군부가 북·미 양자대화 막았나…," 『중앙일보』, 2010년 5월 20일.
11) Richard C. Bush III, "The Mind of Kim Jong-Il II," *The Huffington Post*, 26 May 2010.
12) Narushige Michishita, "The Cheonan sinking and Kim Jong Il's China visit: Now what?," East Asia Forum, 12 May 2010.
13) 차대운, "천안함 사건, 北의 中 묶어두기 전략일 수도," 『연합뉴스』, 2010년 5월 24일.
14) Mike Chinoy, "Method in North Korea's Madness," *Forbes*, 17 May 2010.
15) Selig S. Harrison, "What Seoul should do despite the Cheonan," 『한겨레』, 2010년 5월 14일.
16) Scott Snyder, "The Cheonan Attack: Torpedoing Chance of Peace?," *Yale Global*, 27 May 2010.; Victor D. Cha, "North Korea: Succession Signals,"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26 May 2010.

여 한국의 번영을 위협하고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그리하여 더 많은 것을 뜯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로 더욱 자신있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는 (간접적 배경으로) 핵 무기 보유에 따른 대담성 증가론이다. 이러한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17] 즉, 북한은 과거 심각한 대남 도발을 일으키고도 보복을 받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 1983년 랑군 테러 사건,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등이다. 따라서 북한은 새로운 군사도발을 일으키더라도 한국의 보복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상정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평가에다가, 핵무기를 두 번이나 실험하여 '억지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더 대담해졌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낮은 단계의 재래식 도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덟째는 중국 결박용론이다.[18] 즉 천안함 사건은 멀어져 가는 중국을 북한에 우호적으로 결박하여 전통적 혈맹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서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벌어지면 동북아 세력 균형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관여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의도였다는 것이다.

아홉째는 내부 위기 관심 호도론이다. 천안함 침몰은 대청해전 패전과 화폐개혁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이유는 다른 더 중요한 이유의 부수적 이유로 등장한다.

열째는 종합 셋트 동기론이 있다. 대부분의 논자들은 위에서 거론한 이유 중에서 서너 개를 조합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한 논자는 북한의 핵보유, 후계체제 추진, 내부 문제무마를 거론한다.[19] 다른 논자는 대청해전 복수, 한국정부 대북정책 불만, 후계문제를 지적한다.[20] 모든 요인을 모조리 나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패배 후 실추된 북한군의 명예 회복과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부작용, 경제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전환, 내부단속 강화, 북-미 6자회담 주도권 장악,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를 위해 공격한 의도로 판단된다[21]는 것이다.

김정일이 아니라 하급자가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견해

마지막으로 김정일 또는 북한은 천안함을 공격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 그렇지만 하급자 중의 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식의 주장도 있다. 즉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이유는 딱히 찾기 어려우며, 북측이 실제로 공격을 했다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다.[22] 한 논자는

17) Scott Snyder, "The Cheonan Attack: Torpedoing Chance of Peace?," *Yale Global*, 27 May 2010.; Victor D. Cha, "North Korea: Succession Signals,"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26 May 2010.; David E. Sanger and Coe Sang-Hun, "North Korea Cuts All Ties With South," *The New York Times*, 25 May 2010.
18) 차대운, "'천안함 사건, 北의 '中 묶어두기' 전략일 수도,"『연합뉴스』, 2010년 5월 24일.
19) Yoon Young-kwan, "The Gambler of North Korea," Project Syndicate, 13 May 2010.
20) Victor D. Cha, "North Korea: Succession Signals,"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26 May 2010.
21) 군정보당국, 北정찰총국 소행 의심,『연합뉴스』, 2010년 5월 21일.
22) 이도경, "천안함 북 연루說에 북한 전문가 납득 안돼,"『국민일보』, 2010년 4월 21일.

인민생활 향상, 대미관계 개선, 대중국 경제관계 확대를 세 가지 최우선 과제로 볼 때 그동안 북한 지도부의 행동은 예측 가능했다면서 천안함을 공격할 경우 핵심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예측 못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다른 논자는 국제정세에 어두운 북한 군부가 대청해전 복수를 벼르다 (김정일의 지시없이) 도발을 했다고 한다. 한 논자는 김정일이 한국 군함을 어뢰로 공격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북한의 적대국에게 너무도 이로운 행위라는 것으로 본다.[23] 이는 마치 김정일이 자신이 북한 내부에 두더지처럼 숨어있던 우익 스파이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로 인해, 한국은 북한을 보다 철저히 고립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미일 간에는 오키나와 기지 이전 문제가 타결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논자 역시, 정권유지를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다고 본다.[24] 한국 전함에 대한 공격은 전쟁행위이며, 한국에 대한 공개적 전쟁은 자살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김정일이 직접 명령했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오히려 하급자 중의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명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김정일의 권위가 불안정하거나 붕괴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앞으로 내부 혼란이 발생할 것을 예시하기 때문이다.

결 론

여기서는 제기된 여러 견해는 모두가 추론이지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점은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무용한 시도는 아니다. 또한 각 논리마다 다소간에 진실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론은 추론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인식하면서 개선의 창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특히 부분적 진실들을 새로운 보다 종합적 논리를 속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견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면 이렇다. 첫째, 대청해전 보복론이다. 여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대청해전을 보면,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막강하고 준비되어 있는 적진을 향해 돌격한 격이다. 북한은 패배가 자명한 일을 한 것이다. 북한은 이를 빌미로 내부적으로 복수의 칼을 갈았으며, 남북관계에 군사긴장을 극도로 높이는 행동을 했다. 북한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패배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김정일 후계 구축 활용론이다. 이러한 논의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과 행위를 후계구축 활용이라는 단일 원인으로 환원해 버린다. 이러한 논의는 후계구축 문제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핵 문제, 주변국과의 상호 작용, 내부 경제 상황, 정권 대 사회 관계 등이 제기하는 고유한 구조적 문제와 동력을 무시한다. 셋째, 6자회담 파탄용, 한미이간용,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 자초론, 한국 대북정책 전환 유도용, 김정일 하급자 소행론 등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되고 세련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매우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다. 김정일 건강 문제, 남북 및 미북관계 악화라는 전략적 위기에 대하여 북한은 돌파라는 강경 대응 기조를 채택하고, 핵무기 보유와 대외투자유치라는 동시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추진해왔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강경과 유화의 전술을 배합해왔다. 천안함 공격은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3) John Feffer, "Kim Jong-Il: Right-Wing Mole?," *Foreign Policy in Focus*, 25 May 2010.

24) Ruediger Frank, "An Act of Open Insubordination? Implications of the Cheonan Incident for Domestic Politics in North Korea," 38 North: Informed Analysis of North Korea, 9 May 2010.